

보도시점 2026. 8. 10.(월) 배포 즉시

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10.(월) 국민일보(온라인), “수당처럼 인식할라”...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추진 시끌

- 청년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지만, 청년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만큼 이직을 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.
- 전문가들은 첫 직장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 취지에는 의미가 있지만,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이직을 유인할 가능성을 지적한다.

2. 설명 내용

- 최근 어려운 청년층 고용상황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층 특성을 고려할 때,
 - 청년이 실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
- 아울러, 선진국에서도 일본, 독일, 영국, 스위스 등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상당수임
-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,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
 - 특히,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요건, 수급액, 수급일 등에 대해 노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	담당자	서기관	조경선 (044-202-7374)

